

第234回国會  
(定期會)

#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2年9月5日(木)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견
2. 한국근·현대사고교과서검정관련보고(계속)
3. 수해지역학교피해상황과향후응급조치계획에관한보고

## 審査된案件

- |                                   |    |
|-----------------------------------|----|
| 1.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견 .....             | 1  |
| 2. 한국근·현대사고교과서검정관련보고(계속) .....    | 2  |
| 3. 수해지역학교피해상황과향후응급조치계획에관한보고 ..... | 26 |

(14시45분 개의)

○**委員長 尹榮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丘冀盛**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尹榮卓**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정기국회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기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원내 의정활동이 다소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적한 교육현안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우리 교육위원회가 많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내어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는 견인차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국정감사, 예산·결산 심사와 법률안 심사 등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1.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견

(14시48분)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견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를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양당 간사 간에 진지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석 기간과 공휴일 및 감사 준비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 일수는 11일간으로 되어 있고 이 기간 중에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총 22개 기관에 대해 직접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에 대해서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감사를 실시하고, 대한민국학술원 등 5개 직속기관은 본부 감사 시에 출석하도록 하여 함께 감사를 받도록 하

였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7개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3일간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8개 기관은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경북·전남·대전 등 4개 교육청은 참고기관으로 배석시킨 가운데 감사하도록 하고, 부산·제주·경남·강원 등 4개 시·도교육청은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수해지역 등의 사유로 이번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지역교육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감사 후 지역교육청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 감사대상기관 감사 시 배석한 기관에 대해서는 구두보고 없이 서면보고로 대체하며, 감사장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신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감사는 예년과 같이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감사와 관련한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월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감사 시에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정석중 전남대학교 총장과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직무대행인 李淳福 경남대학교 총장을 개별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의견을 취합한 후에 재작성하여 전체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국정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2002년도 국정감사계획안 중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그리고 보고 및 서류 제출, 증인 출석 요구 등에 대하여는 계획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은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회에서 채택된 국정감사계획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은 위원장 및 각 당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한국근·현대사교과서검정관련보고(계속)

(14시55분)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근·현대사교과서검정관련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역사교과서진상조사소위원장으로 부터 그동안의 활동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黃祐呂 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黃祐呂 역사교과서진상조사소위원장 黃祐呂 위원입니다.

그동안의 소위 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여야 위원 모두의 합의로 역사교과서진상조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8월 28일까지 약 3주 동안 네 차례의 회의소집을 한 바 있습니다만 민주당 위원님과 자민련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그 결과 두 번은 회의가 무산되고 두 번은 회의를 개의하기는 했습니다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와 서류 제출 요구 등 진실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안건들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회의에 출석하신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님, 玄勝一 위원님과 함께 앞으로의 소위활동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다른 당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소위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 이 문제를 전체회의에 다시 넘겨서 다루기로 하고 사실상 소위활동을 종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역사교과서진상조사소위원회는 한국

근·현대사 고교교과서 편향성 기술 의혹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의 정비를 통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두 가지 활동목표를 전체회의로부터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만 말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위 활동을 마치게 되어 소위원장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한국 근·현대사 고교교과서 검정 관련 주요 조치 경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相周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일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드린 한국 근·현대사 고교교과서 검정 관련 보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익하고도 적절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그동안 고교 검정교과서 수정·보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을 기본으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교육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 그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사교과서에서 현 정부에 관해서는 연표나 자료로 제시하거나 현 정부의 출범사실과 국정지표 정도로 기술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출판사와 저자가 교과서 집필방향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광복 후 각 정권별 기술내용 및 삽화나 사진의 내용도 재검토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그동안의 주요조치 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李相甲 학교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教育人的資源部學教政策室長 李相甲 학교정책

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32회 교육위원회 결과와 그간의 주요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순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일에 열린 제232회 교육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날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검정통과본 최현대사 부분에 대한 정밀분석 및 검토계획 또 검토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 계획, 최현대사 부분을 객관적 사실 설명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유도하고 추후 검정 시에는 최현대사 기술범위를 설정하여 검정기준에 제시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편향 기술된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셨고 재발방지책으로 현 정부를 기술하지 않는 방안 강구 및 국정교과서 상의 기술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으며 일부 언론보도를 근거로 위압 의혹 여부를 제기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른 그간의 주요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통과본 최현대사 부분에 대하여 8월 1일부터 담당 편수관이 전문가 등에 의뢰하여 합격된 4종에 대하여 분석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류 등 부적절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밀분석 검토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계 의견수렴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8월 6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에 걸쳐서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원순 교수 등 아홉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공개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요의제는 최현대사 기술범위 설정 및 기술방법의 문제, 검정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문제였습니다.

주요의견은 현 정부 기술은 역사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현 정부에 대한 주요사건은 연표 등 자료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고 기술방법은 집권자 중심보다는 주제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현대사 부분은 객관적 기술도 중요하지만 균형 있게 기술해야 하고 국정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나 변화에 따른 철저한 검정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며 합격본 수정은 교과서 검정제도의 취지상 출판사 자체 수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8월 14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위원 열두 분을 모시고 또 비공개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최현대사는 객관적인 서술이 어려우므로 국

정지표 소개 또는 주요사건 연표 제시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며 보천보전투는 역사적 사실의 하나로서 취급할 수는 있으나 다른 무장투쟁과 대비하여 균형감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정부 수립 이후의 역대 정권에 대한 균형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 근·현대사 편수담당자가 역사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유선 설문조사를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역사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최현대사의 사실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특성상 최현대사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고등학교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유선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신설로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온 현대사 학습이 보완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객관적 사실 중심의 자료 구성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교과서는 주요 교수·학습 자료의 하나이며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몫이므로 과거와 같이 교과서 내용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출판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집필진 선정 시 영리적인 면보다는 교육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따라 각 정권에 대해 균형감각을 가지고 기술하도록 하고 현 정부는 연표식, 국정지표 정도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다섯 차례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협의를 거쳐서 우리 부에서는 지난 8월 29일 한국 근·현대사 수정·보완 기본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기본방향은 검정체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며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사회에 대한 발전적 전망을 담은 최현대사 기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한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

현 정부에 관해서는 연표 및 자료로 제시하거나 현 정부의 출범 사실과 국정지표 정도로 기술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출판사와 저자가 교과서 집필방향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수정하도

록 하며 광복 후 각 정권별 기술내용 및 삽화, 사진의 내용도 재검토하여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천보전투 등과 같이 학계의 평가가 분분하거나 연구성과가 축적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직접 다루기보다는 각주나 학습자료란을 통하여 소개하고 다양한 학설을 병기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정·보완방안 확정에 따라서 어제 9월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출판사 관계자를 모아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수정·보완의 기본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수정·보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출판사 대표들은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계의 전문적 견해와 국가·사회적 요구의 조화 유지, 검정체도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방안 강구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출판사 자체 수정·보완작업은 8월 29일 수정·보완방안 확정 발표에 따라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제부터 9월 말까지 1개월간 우리 부 교과서편찬기본지침에 의한 수정·보완 또 기본적인 사실 오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우리 부에서도 9월 중에 검정통과본 4책에 대하여 수정·보완방안에 의거한 내용 검토 및 오류·오식 검토 또 출판사 수정 결과와 비교하여 필요 시에 추가 수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검정통과본의 수정·보완사항을 10월 초에 확인하고 전시본 배포 및 채택이 10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 말까지 인쇄되어서 배포되도록 하여 교과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수정·보완작업은 최종인쇄본 생산 직전까지 계속해서 추진되며 추후의 오류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정부 측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田溶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溶鶴 委員**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월 29일에 발표된 내용과 그에 따른 9월 4일 출판사 협의회를 거쳐서 이제 교과서에 대한 우려는 많이 불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검정교과서문제가 파생된

검정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4인을 위촉해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종 도서, 총 66종의 검정위원을 그동안 일괄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위원을 보면 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구 교육청 과장 한 분, 대학교수 두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이틀 동안 66종, 약 2000명의 추천위원을 심사해서 과목별로 10인의 검정위원을 선정하는데 과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선정작업이 가능한지, 저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는 능력 있는 검정위원을 추천해서 엄정한 검정으로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한다는 검정심사위원회제도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2종 교과서가 66종이나 되는데 과목별로 검정위원을 10명씩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660명에 이르는 방대한 인원을 인선하게 됩니다. 특히 3배수로 추천된 인사 약 1960명을 선정위원 4명이 이틀간에 심사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교육부 측에서 선정위원 인선이 교육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하려는 뜻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검정위원 선정을 하는데 선정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분야별로 전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첨부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들이 1960명이나 되는 검정위원의 전공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서 검정위원을 선정했는지 이 부분을 좀 밝혀 주시지요.

학교정책실장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예.

○**田溶鶴 委員** 구체적으로 선정되는 사람들의 전공, 특히 특정분야 전공을 어떻게 확인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학교정책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의 선정위원은 과거 교육계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으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책수가 적은 것은 검정위원이 한 4, 5명밖에 되지 않고 또 책수가 많은 것은 10명 내외인데, 나름대로 오랜 동안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선정을 해 왔고 별 차질이 없었습니다.

○**田溶鶴 委員** 바로 이 검정위원 선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金成東 전 평가원장이……

물론 그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평가원은 추천만 했을 뿐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고 모든 일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처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빌미를 교육부에서 제공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검정위원 명단을 보더라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추천한 12명 중에 4명은 집필자라고 해서 제외가 되었고 나머지 8명 중에서 1명만이 검정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일을 전부 처리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은 책임이 없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이번 조치와 함께 검정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검정위원회의 심사와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金貞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 委員**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역사교과서 왜곡 건 때문에 교육위원회 회의할 때 부총리께서 상당히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역사기술이 주관적으로 된다면 학생들에게 상당히 편향적인 역사인식을 심어 줄 가능성이 있다는 데 공감을 한다, 또 이 부분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난 데 대해서 부처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한다,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아울러서 교육위원 중에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현 정부의 치적은 포함 안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할 때도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청와대 회의에 가서 대통령한테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金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부총리로서는 당연히 공정성 시비가 일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에 대해 책임자로서 사과를 한 것인데 왜 사과부터 했느냐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부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직언

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셔야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생각을 또 바꾸었어요. 당장에 내려와서 현 정부 부문을 기술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셨습니다.

교육을 총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께서 대통령에게 용감하게 직언을 하지는 못할망정 당초 국민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번복해 버리고 또 역사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처음에는 현 정부 부문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더니 이것을 별안간 바꾸어 놓으시는데 그 바꾸어 놓는 과정을 보니까 본인이 직접 사회를 보시면서 역사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몇 번 하시고 여론조사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부총리께서 직접 사회를 보면서 이 방향으로 몰고 가신 것에 대해서 아주 섭섭합니다.

제가 여기서 회의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여기에 나와 있던 전문가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많아요. ‘현 정부의 치적은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다……’ 이것은 안 다루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다루더라도 극히 사건 중심으로 하고 인물 중심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한 문항을 보니까 ‘최현대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을 안 물어 봤어요.

지금 현 정부를 포함시키려고 최현대사라는 말씀을 넣으신 것 같은데, 맞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습니다.

○金貞淑 委員 여론조사할 때 최현대사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지요.

여의도연구소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현 정부와 관련된 사항들을 현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국사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국민들한테 물었더니 수록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28%, 수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5%입니다.

왜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들을 살짝 혼돈시키니까? 국민들은 최현대사가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현 정부 것을 넣는 것이 좋으나 안 넣는 것이 좋으나라고 물으셔야지요.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이 통계만 말씀드릴게요. 반대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국민들의 정서는 조사도 안

하고 유선으로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하고 지금 합법적인 참고자료로 제시하는데 본 위원으로서 이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현 정부 하에서 기술되는 교과서에는 현 정부의 업적이나 실패한 정책을 다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하에서 만들면서 어떻게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그래요. 교과서가 통과 안 되면 출판사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천보전투 관련입니다.

이 보천보전투는 김일성이 대중 앞에 영웅으로 출현하는 데 제일 처음 밑거름이 된 전투입니다. 이것을 교과서에 신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지금 보천보전투 문제는 항일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까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안 해 오다가 최근에 역사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인정되지만 아직도 그것의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학자한테 물어 보니까 이 사실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교과서에 언급하는 것은 좋은데 본문에는 넣지 말고 학습자료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다양하게 기술해 주는 것이 좋다……

○金貞淑 委員 아직 학술적인 평가가 안 끝났다고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학술적인 평가가 안 끝난 것은 이 시점에서는 안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래서 저희들도 역사교과서를 기술하면서 정치인들의 의견을 듣느냐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듣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金貞淑 委員 정치인들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되지요. 참고로만 해야지요. 역사학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런데 역사학자들 대부분의 의견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보천보전투는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에 쓰여

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金貞淑 委員** 국민들의 정서도 중요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이승복 사건 난 것 보셨잖아요? 이 시각이 지금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천보전투는 좀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도 교육과정평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난 것입니까,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사퇴한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것은 金成東 원장이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교육부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임 건의를 했는데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金貞淑 委員** 대답을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청문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럼요.

○**金貞淑 委員** 그러면 이 역사교과서 사건의 책임이 평가원장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보기에는 김성동 원장의 해임을 건의한 이유는 사실은 아주 종합적인 연구원……

○**金貞淑 委員** 그러시면 왜 하필 이때 합니까? 왜 오해 받기 쉬운 이때에 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쌓인 것입니다.

○**金貞淑 委員** 쌓였으면 나중에 해야지요. 이것은 이대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시험부터……

○**金貞淑 委員** 작년에 수능이고 뭐고 쪽 쌓인 것이 있으면 나중에 조사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민주화, 민주화 하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별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조사하는 데입니다. 거기에다 의뢰해서 뒷조사를 하고 평가원의 모든 직원들을 불러들이고 또 서류를 전부 다 가져가고 공포 분위기를 주고, 데려다 조사하면서 “너희 평가원장을 지목하는 수사다. 평가원장이 사표만 내면 다 해결된다”, 증인이 다 있어요. 나는 평가원장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총리께 자꾸 묻는 거예요. 이 교과서 왜곡사건의 책임이 평가원장에게 있는 것인지 부총리에게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부총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깐 나도 어느 것이 옳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사실은 역사교과서의 책임이 아니라 아마 내부 서류를 외부에 유출한 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金貞淑 委員** 글썽, 그런 것이 누적되어 있으면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이 기간을 넘겨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쪽에서 조사를 합니다. 인문사회 연구회 이사들에게 위임되어서 진상조사를 다 하고 있는 와중에 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를 심하게 하고 오늘은 이 국장을 데려다 하고, 내일은 저 국장 데려다 하고 교육평가를 훌쩍 뒤집어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주고 압력을 넣는 수사를 하는 것이 민주 정부인 金大中 정부에서 이 백주에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金貞淑 委員** 그러면 부총리로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니, 잘 되니 뭐니 그런……

○**金貞淑 委員** 모르다니요, 몰랐다면서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어떤 의혹으로 지금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貞淑 委員** 모르다니, 부총리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니, 어떤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 의혹에 따라서 정당한 수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의혹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金貞淑 委員** 의혹이 있으면 고발을 하고 형사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런 절차 없이 공포 분위기를 내면서, 본인을 데려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을 전부 다 들쭉시면서 조사하고 이 사람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압력을 넣는 분위기로 갖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국민의 정부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정부가 국민의 것이 아니라 특별한 특권층의…… 또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어디입니까? 이게 거기에서 조사할 일입니까?

부총리가 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총리가 아니더라도 전 부총리, 교육부가 책임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田溶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위원은 20명이고 검정위원은 10명인데 이 사람들을 평가원에서 관리하거나 다루지 않았어요. 전부 다 교육부에서 뽑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검정위원들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날 평가원장의 답변대로 물 떠다 주고 방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건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교육부의 해명자료예요. 문건을 어디에다 노출했다고 하는데, 시간도 다 틀린 것을 총리실에서 와서 확인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났다는 것…… 그 이튿날 11시경에 판명됐어요.

이래 가지고 미운 털이 박혔다고 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조사해서 사퇴 압력을 넣어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어느 공무원이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능이 2개월 남았어요. 수능 출제위원들은 1개월 후면 정확히 어디에 감금됩니다. 이 1개월 동안에 출제위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다 방향을 제시하고 준비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장래가 달려 있는 수능시험이고 해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평가원장을 바꿔 가지고…… 내가 김성동 원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평가원장을 지금 이 시점에 바꿔야 되느냐 이거예요. 교육부의 수장으로 이 정도의 정책밖에 실천할 수 없는지 의지도 의심스럽지만, 청와대의 누가 뒤에서 조정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정치에 흔들려 가지고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아들도 이번에 수능시험을 보는데 나도 학부모로서 흥분해요. 지금 국민의 총 관심이 수능의 난이도 조절에 몰려 있는데 한 달 남겨 놓고 평가원장을 바꾸고, 평가원장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조사해 보고 교육에 지장 없게 해 줘야지요. 정말 잘못하면 축대밭이 될지도 모르는 입시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을 교육부총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너무나 걱정되고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동 원장은 작년에 수능시험 출제 난이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金貞淑 委員** 그러면 그때 무릎을 치지 왜 지금 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월에 또 연합학력고사를 치면서 여러 가지……

○**金貞淑 委員** 글썄, 그런 부분들은 조사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터지니까 조사도 안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목을 치냐고요. 답변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리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관리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성동 원장님은 사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이 교과서 이전에 이미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교과서 문제도 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貞淑 委員** 글썄, 제가 그날 보니까 김성동 원장의 태도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수능이 이제 1, 2개월밖에 안 남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필 교육을 잘 해 보겠다고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께서 이때,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수사해도 몇 달 걸릴 텐데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옳았는지, 그리고 역사교과서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저에게 평가해 보라고 한다면 김성동 원장은 책임이 극히 적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교육부에서 다 해 놓고 뭘 그 사람에게 책임을 씌웁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이제까지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밝혀진 것에 의하면 민간 출판사가 저작해서 바로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딱 나왔을 때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심사할 기회가 없었고……

○**金貞淑 委員** 그러니까 내가 100% 교육부 책임이라고도 안 해요. 이제부터 바로 잡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위원회에 나오셔서



바로 잡겠다고 답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기술 부분은 재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따지고 싶은 것은 대통령한테 한 번 혼나고 나오시더니 왜 갈팡질팡 흔들 흔들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교육부총리를 어떻게 믿고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맡길 수가 있냐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 인격을 굉장히 모독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金貞淑 委員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독 안 할 수가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청와대에서 질책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의견을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 기술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제가 만나 본 역사학자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제외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金貞淑 委員 그러면 그날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저도 질의를 했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했는데 왜 부총리께서 거기에 공감을 하셨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사회를 보면서 몰고 갔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씀입니다.

○金貞淑 委員 아니, 그 장소에서는 몰 수도 있고 안 몰 수도 있어요. 지난번 회의 때는 분명히 개인 의견인 것처럼 공감을 해 놓고 왜 지금은 태도가 싹 바뀌어졌느냐 말이에요. 바뀐 계기가 대통령한테 한 번 질책 받고 와서 그랬는데, 문제가 두 가지예요.

질책 받는 순간에 왜 대통령께 자세히 해명을 못 했습니까? 직언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을……

○委員長 尹榮卓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金貞淑 委員 그러시면 국정감사 때 하고 더 필요하다면, 지금 끝까지 무슨 문건을 한나라당에 했다, 이것을 샘플로 삼아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과 기관장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정말 이 문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국민 앞에 밝힐 수

있도록 나중에 국정감사 때 해명이 다 안 되면 청문회라도 열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청문회를 하고 안 하고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榮卓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일괄답변할 때 해 주시고 金貞淑 위원님의 질의는 시간이 지나서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在禎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禎 委員 새천년민주당 李在禎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수재로 온 국민이 걱정과 근심 속에 있고 수재를 당한 지역에 있는 수재민들의 슬픔과 아픔과 앞날의 아득한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 앞에 오히려 죄송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수재지역의 학교 상황이 어떤지, 또 수재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고민하고 의제로 삼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제가 근·현대사 고교교과서 검정 관련 보고입니다마는 사실 제 생각에는 얘기를 이쯤에서 접고 부총리께서 준비가 안 되셨겠지만 수재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님께서 시종 전제하기를 이번 교과서 문제가 왜곡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왜곡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진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우리가 소위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를 누가 왜곡한 것도 아니고 왜곡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총리께서 전에도 아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검정교과서 문제는 결국 각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필자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필자들이 근·현대사라고 하는 역사교과서의 어떤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 책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리고 그 출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역사교과서를 검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검정위원회가 검정을 한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습니다.

○李在禎 委員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무슨 지침을 주거나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전혀 없습니다.

○李在禎 委員 사실 검정교과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민족주의 사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저는 검정제도라는 것이 별로 좋은 전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이런 선진국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아주 자유롭게 발행하고 학교 자체에서 교과서 선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들이 교과서 선정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교과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이 선진국의 선례인데 반해서 우리가 세계화, 개방화, 자율화의 경쟁체제 속에서 검정제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대적으로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니다마는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교과서 발행제도는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유주의적인 사회로 갈수록 국정제보다는 검정제, 검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정, 검정, 인정 세 가지를 병행하고 있고 영국,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자유발행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데 문화적인 사정, 국가적인 사정, 남북분단상황 같은 사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발행제는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교과서 문제 전문가간담회를 8월 6

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알기로 역사학계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는 이만열 교수나 유영익 교수, 한영우 교수, 조동걸 교수, 이원순 교수, 고영권 광장중학교 교장, 역사교육연구회 이경식 회장 이런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검인정 과정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로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셨나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검인정에 대해서는 이번의 이런 문제로 해서 국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충고가 많았고, 이번에 검정으로 간 것은 처음인데 잘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검정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침을 사전에 더 많이 이 준비했어야 했다는 충고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검정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질책이 없었습니다.

○李在禎 委員 이번 검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없으셨나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 자리에서는 이번 검정과정에 대한 것은 별로 없었고 단지 내용상 최현대사에서 현 정부를 기술하는 면에서는 통치자 위주, 대통령 위주, 정권 위주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주제별로, 제도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李在禎 委員 金成東 원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습니다.

○李在禎 委員 국가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李在禎 委員 그렇다면 그런 기관의 장이 가치가 있든 없든 내부의 공적문서를 밖으로 유출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저는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봅니다.

○李在禎 委員 정부출연기관의 책임자가 정부의 공식문서를 어느 정당에 임의로 유출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위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니다.

○李在禎 委員 이 문제는 검찰당국에서 따지게 되겠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그렇습니다.

○李在禎 委員 아무튼 유출경위와 위법여부에 대한 것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건이 위법이나, 아니냐 또 유출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역시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이번에 수사하는 내용은 문서를 유출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문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사회의 어떤 문건이든,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간에 공적인 문건이 밖으로 유출된다, 더군다나 부총리에게 보고되는 문서를 부총리가 아직 받아 보기도 전에 다른 기관에 유출한다는 것은 전 공직사회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런 문제가 정치권과 연계되어 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왜 이렇게 정치문제로 쟁점화되느냐부터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다양화,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서 검정교과서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6월 25일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李在禎 委員 사실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와 함께 사실상 검정교과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를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그런 정책적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동감입니다.

다른 특별한 계획보다도 이런 출판사가 양서로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냄으로써 경제적인 이득도 오면 점진적으로 출판사가 더 강해지고 훌륭한 책을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在禎 委員 그리고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제9조에 의해서 2차에 걸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합격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여러 가지 막대한 손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대비책과 함께 이런 사람들에게 소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져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취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지역에 있는 학교의 피해상황과 학생들에 대한 조치, 더 나아가서 전국의 수십만 학생들이 아폴로논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런 전염병 때문에 학교마다 휴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총리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질의에 답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전국 학교의 수재상황 또 이에 대한 지원과 복구대책 그리고 아폴로논병의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문서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지금 복사를 해 가지고 바로 올리겠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것을 주시면 저희도 함께 고민하면서 교육인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검토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李在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委員 부총리께 몇 가지만 물겠습니다.

지금 李在禎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재현장을 몇 군데 가 봤는데 강원도 양양 서면 용천리에 한남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그 저께 교장을 만나 가지고……

○李在五 委員 2층짜리 학교인데 1층까지 흩어차서 제가 갔을 때는 군인들이 와서 교실 안에

있는 흠을 퍼내는 것을 봤는데 그런 학교가 전국에 많을 것입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 있는 산간학교 또 강원도 남대천 줄기에 있는 산간학교들은 거의 그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에서 두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전염병대책, 방재대책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조속히 등교할 수 있도록 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복구작업을 해 주시고 또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이런 학교로 배정하셔서 학생들이 빨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원도 자치단체에도 의견을 전하셨습니다마는 신경을 써 주시고 전국의 수재를 당한 학교들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저께는 강원도를 방문했고 어제는 경남지역을 다 돌고, 한 16개 학교를 돌아 보고 왔습니다.

○李在五 委員 저는 그날 시간이 없어서 한남초등학교 한 군데만 가 봤습니다.

지금 金成東 원장 문제를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솔직하고 싶은데 金成東 원장이 교육평가원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한에 부재입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이고 우선 사건을 놓고 볼 때 아까 金貞淑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부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내부문건 유출과정에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부문건이라는 것이 정부 공식문건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보도자료라는 것, 팩스로 온 것을 여야위원들이 다 같이 봤는데 그것이 정부 공식문건입니까, 어떻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저녁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그 이튿날 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된 실무자들의……

○李在五 委員 그것이 정부 공식문건이냐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지요, 공식문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李在五 委員 그러면 정부 문서번호가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문서번호는 없었습니다.

○李在五 委員 보도자료에 ‘각 기관 수신, 언론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의 문서수발대장에 올라가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것은 아니지요.

○李在五 委員 그러면 그것을 정부문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문건은 다 정부문건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러나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李在五 委員 우리가 다 알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교육부가 작성한 보도자료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보도자료는 아닙니다.

○李在五 委員 제목이 ‘보도자료’입니다.

그 문건 안 보셨어요? 그날 팩스문건을 교육위원회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보도자료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관련보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려고……

○李在五 委員 그 문건을 교육부가 만든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습니다.

○李在五 委員 교육부가 만든 것을 평가원 직원이 같이 있다가 한 부를 가져와서, 그 이튿날 아침에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이 무슨 자료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하니 평가원에서 보내 준 것 아닙니까?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런데 그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李在五 委員 나는 그것만 묻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평가원이 아무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李在五 委員 그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도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이 마침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줬는데 만약에 민주당이나 다른 데서도 보내달라고 했으면 보내줬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밀문건입니까, 비공개문건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비밀문건은 아니지만 실무자가……

○李在五 委員 그것이 무슨 대외비 문건입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해명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가 만든

대외보고문건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향후조치 계획을 장관한테 제안한 것입니다. 장관한테 제안한 것을 제가 보기도 전에 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李在五 委員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문건도 아니고 교육평가원에서 스스로 작성한 문건도 아니고 비공개, 비밀을 요하는 문건도 아니고 평가원이 그야말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를 마침 한나라당 전문위원이 보내달라고 하니깐, 그것도 비밀로 사람을 보내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만인이 다 열람할 수 있는 팩스로 보내준 것인데 정부문건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하명을 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라는 데는 권력형 비리와 청와대 하명사건을 조사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다 그것을 무슨 큰 대단한 문건 유출이라고 조사해 갖고 사람 목을 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사범학교 나와서 젊어서부터 평생을 교육에 몸 바쳤는데 그렇게 해서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 쫓아내면 교육부에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치고 성한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경찰수사를 지시한 것은 없고 사실은……

○李在五 委員 그게 발단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 솔직히 나는 金成東 평가원장편을 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 있으면 트집 잡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가지 치려면 얼마든지 치지요. 사람의 목숨을, 더구나 공직자의 신분을 그런 식으로 박탈하면 되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신중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한 것도 없고 저희들은 여러 케이스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해서 해임을 건의했을 뿐입니다.

○李在五 委員 부총리!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李在五 委員 저희들도 여당 해 보고 야당 해 보고 다 해 보았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을 15대, 16대 다 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야당으로서 그래도 비교적 교육부

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엔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사표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들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을 팩스로 보낸, 비공개 비밀문건도 아닌데 그것을 유출했다고 해서 임기 말의 권력누수를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모델로 삼아서…… 한 마디로 말해 희생양 만든 것 아닙니까? 다 아는 소리 아닙니까?

임기 말의 권력누수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문건 여기저기 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金成東 씨를 모델 케이스로 희생시킨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사실은 작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李在五 委員 문제가 많았으면 문제가 많을 때 해결해야지 이것을 왜 정치적으로…… 나는요, 사퇴하고 안 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한 공직자의 공직을 그만두게 한 과정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살인적이고 비정하다 이거예요. 우리 그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정부문건이라고……

그게 뭐니까?

○薛勳 委員 전혀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게요.

○李在五 委員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라고 하는 곳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 나라 교육을 담당해야 될 데 아닙니까? 그 교육부가 일을 정치적으로 비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이게 만행이지요. 야만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李在五 위원님, 비교육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李在五 委員 이래도 알고 저래도 다 알아요. 여기에 무슨 핫바지만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처음 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장관에게 대책을 보고하는 문서를 빼 가지고 밖에 주었다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합니다.

○李在五 委員 그게 무슨 장관한테 보고할 문서예요? 그게 무슨 비밀문서예요? 내용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비밀문서

든 아니든 장관에게 보고할 문서인데 장관도 보기 전에 나갔다는 사실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李在五 委員 그게 무슨 장관에게 보고할 문건이예요? 그 문서는 교육부가 작성한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교육부가 작성했지요.

○李在五 委員 됐습니다. 제가 그 정도 하겠는데요,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알고 어떤 시각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부총리께서는 밑의 공직자들 아껴야 됩니다. 자기 사람을 아끼고 보호하고, 책임이 있으면 대신 지고, 영광이 있으면 밑의 공무원들에게 돌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저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金成東 씨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李在五 委員 그것을 무슨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모가지를 치고 내사를 시키고 경찰청이 동원되고…… 이게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가는지 두고 보십시오.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문건이 정말로 엄청난 내용이라서 ‘아, 이것은 진짜 정부 공직자로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생각될 것 같으면 말 안 해요.

야당인들 정부나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지 정부나 국가를 위해서 일 안 할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사를 해야지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책실장이 말씀하실 때 요즘 꼭 교과서 내용대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학생과 교사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수능고사 출제할 때 제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교과서지요?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 委員 출제위원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과서 아닙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교육과정 내용입니다.

○李在五 委員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용인데 교육과정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교과서 아닙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능고사 문제를 출제할 때 수능고사 출제위원들이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갖고 들어가지만 기

본적으로는 학교교육에서, 공교육이 가르치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하는 것 아닙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그렇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가 학습안을 짤 때 교과서에 충실하도록 교과서를 기준으로 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예.

○李在五 委員 그래야 학생들도 비교적 교과서를 충실하게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과서가 잘못 기술되어 있다면 또 교과서가 편향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모든 학생들이 그 교과서를 달달 암기하듯이 외워야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어린 학생들 머릿속에 잘못된 역사관이 심어질 수 있지요?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춘 것입니다.

○李在五 委員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중요합니다.

○李在五 委員 이것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있거나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적어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 학교 교사의 말이나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든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는 때 아닙니까, 그렇지요?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그렇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래서 교과서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예, 교과서가 중요한데 그 외에 지금은 다양한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李在五 委員 물론 다양한 자료도 있고 학원도 다니고 학습참고자료도 있지만 수능고사나 각종 입시의 기본은 교과서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학생들이 참고서를 보거나 하는 것은 교과서에 대한 보충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한 것이지요.

교과서가 왜곡되거나 편향적으로, 주관적으로 기술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예.

○李在五 委員 그래서 현 정권의 업적이나 실책이나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주관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도 당대의 평가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한 것도 후대에 가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정권하의 역사 기술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무슨 객관적인 연표나 이런 것만 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실 때 교과서 만드는 회사 사람들하고 저자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출판사에만 맡겨 놓지 말고 교육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예, 알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교육부가 검정하는 절차가 있지요?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검정하는 절차에 책임감을 갖고 검정을 잘하셔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金貞淑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최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확실한 시대의 구분은 없지만……

○李在五 委員 시대 구분을 한다면 말입니다.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시대 구분을 한다면 제가 보건대 최근 20~30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러면 지금이 2000년대니까 1980년이면 제5공화국 全斗煥 군사 쿠데타 이후를 최현대사로 봅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저는 역사학은 전공하지 않았지만 학자들이 편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역사학에서 최현대사라는 시기 구분은 없습니다. 근대사, 현대사, 최근대사 이런 것은 들어 보았어도 최현대사라는 시기 구분은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를 졸업해서, 요즘 역사공부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역사학에서 ‘최현대사’라는 것을 시기 구분으로 설정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문제를 다룰 때 아마 군사정권 이후 문민정부 들어서서 金泳三 정권과 金大中 정권을 머릿속에 최현대사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군사정권까지는 일단 평가가 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의 기술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말씀도 최현대사 부분은 그야말로 평가는 없고 그저 국정지표 정도만 그리고 자료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李在五 委員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金敬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敬天 委員 金成東 원장 사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金 전 원장에 대해서 교육부가 한국교육평가원에 대한 감독관청인 국무총리실에 해임건의조치를 요구한 시기가 지난 8월 6일로 알려지고 있고 교육부가 金 전 원장에 대해서 총리실에 해임을 건의한 이유를 보면, 첫째 작년 2001년 11월 실시된 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고, 둘째 2002년 6월에 서울시 주최로 실시한 전국 고등학교연합학력평가 채점에 오류가 발생했고, 셋째는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고 넷째는 교육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킨 것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 전 원장이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을 총괄하는 한국교육평가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미루다가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자 이제야 金 전 원장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한 것은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연합고사 채점에 오류가 났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도 조사

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산하기관장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더 참았던 것입니다.

○**金敬天 委員** 예, 거기에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20일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金 전 원장에 대해 교육부가 요구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내용을 보면 金 원장에 대한 해임에 앞서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사실조사를 한 다음 9월 10일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金 원장에게 청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거 어느 정권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임건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또 金 원장이 인문사회연구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는 지난 8월 23일로 알려져 있으며 사직 사유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는 사람을 놓고 청와대가 개입을 했느니 어쩐느니 하는 외압설을 제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소위 말하는 특수수사과에서 조사한 것은 교육부하고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조사되고 어떤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전혀 몰랐고 나중에야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서너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金敬天 委員** 얼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金 원장에 대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공정한 수사가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언론사의 보도대로 청와대 사정비서실이 金 전 원장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서 직무상 기밀누설 등 몇 가지 사실에 대한 범죄혐의가 발견되고 이 사건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이첩한 것이 사실이라면 金 원장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직 자진사퇴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최고의 지성과 청렴을 두루 갖추고서야 비로소 오를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상실했다고 보아

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합격 여부로 임용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자진해서 공무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장이 징계위에 회부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무원 직위의 청렴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같은 노력에 의한 공무원 사퇴가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金 전 원장에 대한 외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태 당사자인 金 전 원장이 교육부 관계자와 나눈 대화내용이 있다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무총리실에 金 전 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金 전 원장 역시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명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金 전 원장이 있고 또 그 담당자와의 대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金 전 원장의 사퇴서 제출이 외압이나, 아니면 교육부의 해임건의 요청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사퇴했느냐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당사자와 金 전 원장과의 대화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저는 그런 대화를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표를 낸 경위는 우리가 해임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인문사회연구회에 이야기하고 인문사회연구회가 진상조사를 위해서 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임건의한 내용을 조사도 하지 못한 단계에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쪽의 수사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金敬天 委員** 그런 내용이 있다면 후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교육부총리를 질책했다는 보도내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과서 편파기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교육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金大中 대통령으로부터 왜 사과했느냐고 호된 질타를 받았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통령께서 호되게 질책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총리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과할 것까지 있었느냐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수고했다는 뜻으로 한 격려의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사실은 격려도 아니고 질책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중간정도인데요, 우선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은, 검정제도가 되어서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 교육부에 넘겼고 교육부가 그것을 검토할 단계에 오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교육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사과부터 했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질책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지적사항입니다.

○金敬天 委員 다음에는 검정교과서 편수담당자의 교과목 중복담당으로 지나친 업무과중 및 전문성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인력현황을 보면 교과용 도서 편수담당자가 현재 23명으로 되어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습니다.

○金敬天 委員 이는 1996년의 51명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의 정책 변화와 또 현재 편수담당자의 중점업무가 검정과정의 행정적·실무적 보조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교과교육과정 관리조정업무 담당내용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편수담당자 한 명이 두세 과목 영역의 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외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8개 언어영역의 교과서 검정업무를 한 명의 편수 담당자가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편수 담당자의 지나친 업무부담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져서 검정교과서 도입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것은 우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 편수업무를 대부분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수관계에 대해서 행정 관리 업무만 합니다.

○金敬天 委員 그러나 교과목의 중복이라든지 업무의 중복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金敬天 委員 향후 편수 담당 인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것은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의 학교정책실에 있는 편수직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분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아울러 교과서 발행정책이 검정체제로 전환되면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제공과 집필방법을 채택하는 등 검정교과서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부분에 있어 어느 선까지를 규제하고 자율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서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長 李相甲 학교교육정책실장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편수관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편수관도 전문가들로 확충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검정교과서라는 것은 사실은 출판사와 저자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검정교과서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되 우리나라 정서나 현실로 보아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체제를 많이 개선해서 검정체제로 나가는 데 교육부에서 차질이 없도록 미비된 것을 연말까지 보완하려고 합니다.

○金敬天 委員 다음으로 검정위원 인력풀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검정위원회의 비밀 보장이 되지 못해서 검정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한국 근·현대사 관련 인력풀이 전국적으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고 이 중에서 검정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로 검정위원 기피현상이 심

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검정위원 선정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런 상황은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기초학문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관련 교과서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근·현대사보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교육을 위한 남북한 간의 역사교육 문제라든가 또 친일과의 행적에 대한 기술과 평가가 정확하게 반영되게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남북 간 역사에 관한 공통된 인식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 역사교과서 비교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부총리님의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검정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최대한 설득해서 공정하고 훌륭한 검정위원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역사교과서의 비교 연구라든지 친일과 문제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현재까지 되어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현재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연구자료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 玄勝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勝一 委員 玄勝一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고 우리 상위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부총리를 너무 오래 잡아두는 것이 옳은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부총리께서 갖고 계시던 생각과 태도가 가장 적절하

고 옳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총리께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충분히 그것을 판단하실 모든 경륜과 학식을 갖춘 분으로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지난번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대사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최현대 기간 중에는 쓰지 않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본다 하는 말씀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연표를 작성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한 보 물러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한 보 물러서 실 일이 아니고 원래 말씀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구차합니다마는 현 DJ정권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쓰려면 공과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그것을 쓰면서 대통령 인사 비리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연달은 부결사태라든지 만약에 이런 것까지를 역사에 모두 기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잘 써놓았던 부분을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역사를 다시 고쳐 쓴다고 할 때는 그것은 이미 역사교과서가 아니지요.

몇 년 전에 배웠던 학생하고 지금 배우는 학생하고 배운 내용이 다르다면 그것이 역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4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현대사를 일제시대까지만 쓰고 해방 이후는 전혀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 선생님께서, 역사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야 객관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사는 쓰지 않는다 하신 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역사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최현대사는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학생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되고, 최현대에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일반사회 시간에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태도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역시 집권 중인 정부에 대한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천보전투 운운하는데, 제가 과문한 탓으로 이 부분을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고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아는데, 우리 역사교과서에 그것도 무슨 독립운동을 자세히 쓴 것도 아니고 공산당을 쓴 것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한 시대를 한두 줄씩 쓰는 현대사에 도대

체 보천보가 왜 나오니까?

보천보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쓴 서대숙 씨의 ‘한국공산당운동사’를 볼 것 같으면 함경도 보천보의 파출소를 습격한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한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모든 항일운동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전단이 나가고 선전이 된 모양입니다.

그것은 항일의병대장들이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경상도에서 투쟁해도 김일성, 함경도에서 해도 김일성, 이러니까 김일성은 동에도 변쩍 서에도 변쩍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어느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항일운동을 총망라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김성주 김일성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총리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이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는 자체가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교육단체 중 어떤 단체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책자를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사책에 근대사 시기를 어디로 하느냐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차체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문적인 관점에서 어떤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교육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지나간 일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과거의 사실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한 국민된 자의 필수과목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시민은 반드시 미국사를 배워야 되고, 일본 사람은 반드시 일본사를 배워야 되고, 한국 사람은 반드시 한국사를 배우도록 하는 것은 국민교육에 그 큰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친북세력을 만드는 데 역사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소위 남북화해다 뭐다 하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에 따라서 본말이 전도된 현상들이 국기를 문란하는, 이데올로기의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부총리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尹榮卓 위원장, 李在禎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청와대를 운위하는 것이 격에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처음에 청와대는 “우리 정권을 자화자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강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건전한 양식에 대해 고마움과 박수를 보내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金成東 씨는 ‘질책이 나한테 떨어지는구나.’ 해서 자기 살기 위해 책임이 없다고 너무 지나치게 면탈하려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보기에 꽤 씹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이 정부를 잘 했다고 써 놓은 그 교과서에 대해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부총리를 두고 질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를 했느냐?”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태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 교과서가 DJ정권을 찬양한 것을 왜 사과했느냐?” 한다면 국민이 보기에는 청와대가 옹졸하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부총리님의 건승을 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좀 주제가 다른 이야기인데 최근 청와대가 이공계 진학이 부진하다, 기피현상이 있다 하니까 매년 1000명 씩 외국 이공계 대학원 진학생에게 3000불 가량의 국비장학금을 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제안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혹시 알고 계세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玄勝一 委員 제가 부총리님께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신생국가도 아닙니다. 외국 유학을 갈 수 없는 해방직후 같은 때 국비 유학생을 1000명씩 보내는 것이지 대한민국은 지금 그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외국의 이공계 대학원에 나가 있는 학생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 7000명입니다. 1만 7000명이 자기 아버지 돈으로 나갔거나 혹은 훈련단체의 지원으로 나갔거나, 회사 지원으로 나가서 이공계 석·박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씩 3000불을 주어서 보낸다 하는

것은 시대에도 맞지 않고 년센스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쓰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학원은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에 가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한국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석·박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다만 이공계가 안 되는 것은 시설이 모자라고 기자재가 부족한 것 때문인데 1000명한테 3000불씩 보내면 우리 돈으로 1년에 최소한 300억 내지 500억이고 이 학생들이 나가서 박사까지 하고 있는데 5년 걸린다고 볼 때 1500억입니다. 1년에 500억씩 이공계 유학비로 나가는 것을 다른 데 써야지요.

그런 식의 즉흥적이고 엉터리 소리가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청와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신청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玄勝一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한 것인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교육위원회에 넘어오면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정책이 한국의 이공계 대학원을 죽이는 쪽으로 가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몇 가지 간략히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禎 그렇게 하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원래 생각이 적절했는데 그동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최현대사에서 현 정부에 관한 것은 빼는 것이 좋지만 앞으로 전문가하고 역사학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 가지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록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玄勝一 위원님 말씀대로 현 정부에 관한 것은 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만난 역사학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빼는 것이 옳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金貞淑 위원님이 유도했다고 했는데 역사학자들이 유도 당할 사람들입니까? 역사학자들하고 의논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재 교과서가 잘 기술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했느냐?” 이렇게 청와대가 질책해서 현 정권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을 넣은 것처럼 말씀을 여러 위원들께서 하셨는데 이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청와대에서 지적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청와대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李在禎 수고하셨습니다.

金花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花中 委員 새천년민주당 金花中 위원입니다.

한국 근·현대사 고교 교과서 검정관련 문제해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월 6일부터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국사편찬위원, 역사교육 전문가, 역사 교사, 출판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국 근·현대사 고교 교과서 내용으로 현 정부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역시 전문가들은 우리하고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교과서도 써보고 검정교과서를 만들어도 보았습니다.

저도 보건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답답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회에서나 또 일반인들의 의견 수렴이 역사가들이 안목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또 세계적인 시각으로 우리 국민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충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역사교과서에도 현 정부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는지 부총리께서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근·현대사 교과서에 현 정부가 하는 일을 기술하는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기술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아 주셨고 ‘아, 그렇다면 가장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이분들의 의견이 맞겠다.’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는데 혹시 외국의 역사교과서에도 근·현대사에 현 정부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는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건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의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의 내용까지 들어 있고 9·11테러사건까지 들어갔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金花中 委員 저도 그렇게 들었고 신문에서 그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나 또 정치가의 이득에 의해서 제한하는 어떤 것들이 교과서에 반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 문제답지 않은 문제일 수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투철한 생각을 갖고 잘 집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지가 어떠한지 만약 논란이 되면 또 바꾸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평생 학자로 살아 왔는데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참여하고 있는 정부를 미화하고 이쪽으로 할 만큼 비양심적인 학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지무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어쨌든 역사학자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로라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자, 그런데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부정적인 것을 얼마만큼 제공하느냐, 긍정적인 것을 얼마만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또 현재 국민들의 정서에 맞고 사회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花中 委員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6페이지 출판사 자체 수정이나 검정통과본 정밀검토 추진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오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완” 또 검정통과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수정·보완 방안에 의거한 내용 검토 및 오류·오식 검토”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오류인데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혹시 있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류라는 것이 사실적인 오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면밀히 해서 보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金花中 委員 있다면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마치 오류가 있어서 하는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인데 지난번에 수능시험 때도 평가원이 교육부총리 산하로 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까지도 국무총리 산하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가원을 교육부총리 산하로 이관시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하는 생각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 문제는 총리실하고 우리하고 몇 군데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비공식적인 협의는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일들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위탁받아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와 같은 체제로 두어 가지고는 책임 있게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金花中 委員 이관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金成東 원장에 대한 질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어서 질의라기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동 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정부 산하기관의 책임자로서의 원칙적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한 확인과정이 있었지만 내부문서를 외부로 유출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공인의 자세를 망각한 편향적인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동 원장은 기밀을 요할 중요문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판단은 본인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한나라당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되어도 아무 거리낄 것이 없었다면 왜 이 문건 때문에 오늘 또 저에 의해 김성동 원장이 오르내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는 김해 한림면, 충북 영동, 김천에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은 너무나 실의에 빠져있었고 좌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쳐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알고 눈을 부릅뜨면서 “이제 다 싸웠느냐, 더 싸울 일이 없어서 이제 왔느냐?” 하는 식으로 막 따졌습니다. 정말 부끄러웠고 거기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학교를 둘러보면서 보건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수해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아폴로눈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들이 하는 말은 6년 전에는 의사들의 표준처방에 의해서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안약을 아주 초기에 투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만연을 방지했었는데 지금은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의사들의 표준처방에 의해서 보건교사에게 안약을 주면 학생들이 눈이 가렵다고 할 때 초기에 방지할 수 있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셔서 빨리 조치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수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발언을 했다는 기록이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禎 金花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祐呂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 委員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李在禎 간사, 尹榮卓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역사교과서문제를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수해상황에서의 교육 그리고 최근에 아폴로눈병으로 이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 문제는 아까 李在禎 민주당 간사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 남아 계시니까 이 질의 끝나고 정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제 임시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듣고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별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다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와 같이 급박한 현안에 대해서 질의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 소위에서 많은 관계인들 특히 역사학자들이나 국민의 여론

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오늘은 그 결론만 소위원장이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양당의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만을 언급하고 끝을 내야 되는 자리인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뒤늦게, 때에 맞지 않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양당 간에 합의가 되어 구성된 소위원회는 양당이 적극적인 협조로 소위에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야지 상임위에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일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데려다 놓고 일문일답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의사진행이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느냐 하는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소위원회가 상임위의 위임을 받았을 때는 직접 그 점을 검토하셔서 양당 간사한테 원만한 소위원회가 이루어지도록 좀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委員長 尹榮卓 알겠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리고 오늘 문제의 초점은 이것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한테 교과서를 어떻게 써서 가르쳐야 하겠느냐 하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인정교과서의 기술방침이나 그 내용은 국정교과서의 것을 판에 박은 듯이 거의 같은 기준, 같은 방향으로 기술해 왔기 때문에 사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적인 입장, 역사교과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분명해지면 검인정 교과서의 저자들도 이것에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 국무회의 석상에서 “왜 벌써 그것을 책임지는 얘기를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의 국정교과서나 전반적인 역사교과서의 흐름과 문제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하신 말씀이신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차체에 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잘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 정부에 관한 것은 일부 국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술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쟁과 역사적인 우여곡절을 거친 나라에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교과서에 신지 않고 사회·경제와 같이 현상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으면 논술을 통해서 충분히 각 정당의 입장이라든지 정부의 입장 또는 남북에 관한 것들을 학교에서 학습시킵니다.

역사라는 것은 확립되고 검증된 사실과 그것에 대한 평가를 후대에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격심한 정쟁과 많은 사회를 거친 우리나라의 전통으로는 역사라고 하면 그 세대가 지난 다음에 기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표나 자료 정도를 제시하고 국정지표 정도를 기술한다, 이것이 최현대사다 이렇게 정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은 사회 또는 경제, 일반논술 과목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역사부분에는 현 정부에 대한 것을 기술하지 않는 전통을 세우시는 것이 어떠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관의 최종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 긍정적이고 유익한 방면에서 논의를 하려면 검정제도에 대한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책임을 져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이 교과서문제로 일단 그 쪽이 책임을 진 것으로 국민에게는 비쳐지고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과연 교육부에 있느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느냐 잘 구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책임을 묻고 과정을 밝힐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우선 검정위 선정위원이 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위원 4명은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했거나 이러한 특수한 전문분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정위원들이 과연 선정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을까……

또 선정되어 있는 검정위원 숫자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거의 교육부의 의견이 반영되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위원으로 12명을 추천했더니 1명만 선정되었다 이런 보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주도하는 검정위원들에 의해서 검인정이 되는데 그럴 때 과연 평가원이 어떻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정업무 자체에 대해 교육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지, 또 편수관은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또 평가원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장관께서 분명히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동안에 벌써 두 달여를 고심하셨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검정위원들이 공개되는 것을 겁낸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 사관들은 다 공개리에 사관으로 앉혀졌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겁을 낸다고 할 때는 검정과정의 자유롭지 않은 것은 아닌가, 자신들이 소신껏 할 수가 없었고 결국 들러리 서는 것으로 생각해서 마치 매명하거나 현 정권에 자기 자신의 이름이 팔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신 것은 아닌가……

후세를 가르치는 교과서를 확정하는 아주 영예로운 자리에 임명되시는 것을 장관 자리에 앉는 것보다 오히려 더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예전에 사관들이 그랬듯이 목숨을 걸고 기개를 가지고 하시고 또 정부나 우리 모두가 이분들의 그 영예에 대해서는 각별한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체에 검정위원들이 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내는지…… 또 유혹이 오기 때문에 비밀리에 한다,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법관들이 있고 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수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마는 이 사람들 다 공개리에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것도 차체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교과서의 내용은 다양하게 자유발행으로 해서 마음대로 채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입장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마는 과연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일말의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라는 것이 마음대로 써서 그들 중에 아무 책이나 학교에서 책정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될 때는 교육의 포기까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철학적인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교

과서라고 하면 학생들이 진실된 것 그리고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기술되어 있는 책이어야 되지 않느냐, 또 사상이나 여러 가지 이념 갈등이 있을 때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에서 문제가 없는 책을 교과서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준조차도 없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주셔서 어디까지가 교과서인지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언급하기가 상당히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원장이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특명하에 수사가 진행되었느냐, 수사의 내용은 무엇이나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분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형평성은 맞느냐……

물론 전 金 원장의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질타를 받은 바가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한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지만 교육부의 책임과 원장의 책임의 경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과연 정말 일신상의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그만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의문이 듭니다.

또 최근과 같이 정권임기가 끝나가고 새 정권이 들어서고 할 때는 이른바 공무원들의 기강을 단속해야 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줄 세우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비이락이라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중립적이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것이 공직사회를 흔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의 문서…… 이것이 한밤중에 준 것도 아니고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교육부의 입장을 가지고 의논해서 만든 해명성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사람도 이것을 비밀리에 쉬쉬하면서 취급하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공개리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이렇다더라, 또 평가원의 입장은 이렇다더라 해서 위원들도 그것을 공개리에 입수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공개리에 토론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외부유출이 되지 않아야 될 문

서라면 대외비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지극히 온당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입장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경고를 한다든지 한 마디 말씀하시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적 기관입니다. 정부가 야당이라고 해서 자료나 정보를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한 태도는 여당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당에도 1개의 문서도 나가면 안 되고 한 마디 정보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각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3권 분립이 엄연히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의회는 의회, 정당은 정당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이 과연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중차대하게 다루어야 될 내용이었는가, 수사를 앞세우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좀 지나치게 언급하면서 결국은 사표를 내도록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공무원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金 전 원장이 떠났지만, 교육부의 문제와 아울러 교과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또 제도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면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정리되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정리된 다음에 사표를 받았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서 특별히 현대사의 범위, 교과서 입장, 보천보 전투와 같이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문제, 국시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장관께서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薛勳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 委員 역사교과서 왜곡은 전대미문의 범죄행위다, 또 국사범으로 취급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가 조정하고 지휘했다, 말하자면 권력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이런 시각을 갖고 있던 것이 야당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어처구니없다’라는 표현을 이런 때 쓸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황당합니다.

교과서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역사교육을 맡고 있는 학자들이 기술했고 개인 기업에



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교과서인데 그것을 청와대나 교육부가 뒤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기술해라 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같은 문제를 이렇게 전혀 다르게 보고 있을까, 물론 의심암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의심하고 사실을 전혀 다르게 봐 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인간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이지 그야말로 진짜 왜곡해 가지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마치 권력이 악의에 찬 모략을 꾸민 것처럼 전 나라를 들썩이면서 며칠을 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냉정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전혀 아니고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실은 사람들은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역사교육자들입니다. 그분들이 판단해서 실었습니다. 실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고쳐야 할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의 몫입니다. 여기에서 역사학에 문외한인 우리들이 이렇게 써야 한다, 저렇게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역사교육에 관한 내용, 그것이 최현대사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 앉아 가지고 써서는 안 된다, 된다…… 개인적인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지표처럼 되어 가지고 당연히 이것이 답이다, 그러니까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파동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치열한 정치권력을 놓고 다툼에 있는 이런 내용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金花中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해가 나서 우리 정치인들이 봉사활동 한다고 내려갔을 때 국민들이 한 이야기가 “이제 좀 그만 싸워라”,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동 씨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5년 단임이고 임기 말이라고 하지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위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여당이 좀 불리한 것 같고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줄을 서요? 이 문건이 어떤 문건인데, 장관에게 보고도 안 한 문건을 야당에 갖다 쥐 가지고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비겁한 짓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공직자가 취할 자세입니까? 어떻게 감독을 했기에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전에 줬다, 밤에 줬다, 다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밤에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시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본인은 물러났으니까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정말 공직자들이 처신을 바로 해야 합니다.

정권은 바뀔 수도 있고 누가 어떻게 정권을 획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계속 갑니다. 공직자가 아니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공무원이 버터 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왔지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버텼겠습니까?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공직자 기강확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임기 말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삭빠른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묵묵히 가는 공직자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분노가 터질 거예요.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야당이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이고 사표를 쓰는 것은 당연하지요. 특수수사를 했던 어쨌든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지만 어쨌든 사직을 하고 나갔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보고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학생들이 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재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평상시 같았으면 아마 연일 대대적으로 떠들었을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까 金花中 위원의 지적으로는 의약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휴교 지시를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우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하고 달리 탈북자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올 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속 탈북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가족이 탈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도 틀림없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교육체제하고 우리 교육체제가 안맞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안교육의 형태로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아마 그 아이들을 바로 학교에 적응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쪽에서 내려 온 학령기의 아이들은 그 조건에 맞게끔 대안교육의 형식으로 해서 1년 정도 적응시키고 난 뒤에 일반 학교로 보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대부분 일문일답으로 답변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揆澤 위원님, 李美卿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아까 李在禎 간사와 협의를 거쳐 수해지역 학교 피해상황과 응급조치계획에 관한 보고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 수해지역학교피해상황과향후응급조치계획에관한보고

(17시17분)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해지역학교피해상황과향후응급조치계획에 관한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지금 전국적으로 8월 초에 집중 폭우로 인한 수해와 최근에 8월 31일과 9월 1일에 걸친 두 차례의 큰 집중 폭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우리 교육시설에 있어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는 강원도 영동지역을 방문하고 왔고 어제는 경남지역에 가서 김해부터 시작해서 함양, 산청에 이르기까지 전 도를 돌고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전국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 또 전염병 문제는 어제 저녁까지 약 28만 3000명의 학생들이 아폴로눈병에 전염되었습니다. 약 5800여개 학교의 학생들이 전염되어서 부분적으로 소수가 이병에 감염된 학교는 우선 그 학생만 출석을 하지 않게 하고 많은 학생이 감염되었을 때는 휴교 조치를 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42개 교가 현재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문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태풍피해 응급복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청 실적 및 추진계획과 또 대학의 실적 및 추진계획을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개요를 말씀드리면 13개 교육청 관내 519개 교육기관에서 약 12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현재 26개 학교에 972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학생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3개 교육청 관내 519개 시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교 및 휴업 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원 교육청, 경북교육청, 경남, 충북 4개 교육청에서 임시 휴업과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부총리님께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피해가 극심한 지역인 강원도와 경남을 다녀오셨고 피해시설

에 대한 조기 복구를 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재민에 대한 위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자로 시·도교육청에 피해를 조기 복구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속에는 2학기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복구할 것과 수재민가구의 자녀에게 수업료 징수하는 것을 유예하고 유실교과서 및 학용품, 무료급식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업료 지원에 있어서는 시·도교육청이 수업료 징수 유예조치를 취한 수재민가구 자녀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되면 3개월에서 6개월분의 액수를 국고에서 즉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 지역의 분기당 수업료는 중학교는 12만 4800원, 고등학교는 18만 원 정도 됩니다. 또한 교과서나 책가방 및 학용품 구입비도 같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시설 조기복구에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학교기본시설이 재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기본시설의 복구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외곽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액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 교육부에서 국고로 50%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복구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가장 피해가 많은 강릉대 학교를 비롯해서 모두 16개 대학에서 33억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비는 4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사립대학은 경동대를 비롯해서 4개 대학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강릉대는 내일까지, 동해대의 경우에는 모레까지 임시 휴업조치 중에 있습니다.

강릉대, 삼척대 등 대학교의 개별적인 피해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도 피해상황이 지방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접수되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피해상황을 통보하

도록 조치를 하였고 특히 학내의 급수라든지 전기·통신 등 캠퍼스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9월 3일자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사지, 배수로 등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천막을 덮고 주변 임시배수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강릉대 등 임시휴업 중인 대학은 대학 자체예산 즉 기성회예산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시설을 응급복구한 후에 또 국고에서 이·전용을 통해 가지고 대학 자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이나 장비로 조속히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실험실습기자재 등은 9월 중에 재활용 여부를 선별해서 수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 조금 전에 수칙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환자수가 28만 명이고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수가 26만 9000명 그리고 완치가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모두 5840개 학교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는 수업에 지장이 있는 142개 학교에 대해서는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도교육감에게 전염병 발생현황 파악 및 예방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 긴급 추가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이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한 내용이고 또 급성출혈성결막염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를 중지시켜서 병·의원에서 치료하도록 하고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 휴업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당국과 협의를 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역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중지를 명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에 따라서 출석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문가 및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다음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바

와 같이 당분간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하면서 새로 발생하는 학교는 등교 중지 또는 다른 학생들에게 많은 지장이 있는 경우는 휴업을 통해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부당국에서는 태풍피해 응급복구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계획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까지도 조금 전에 보고 들은 대로 우리가 걱정하는 이상으로 대비를 잘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黃祐呂 委員**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셨는데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몇 가지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아폴로눈병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것이 학교에서 개인 학생들에게 수칙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데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등교했을 때는 실제로 소독약을 탄 물 같은 데에 전 학생이 손을 한번 닦고 수업이 들어가라든지, 예전에는 학교에서 한 예가 있는데 어떠한……

또 金花中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지만 대개 손을 잘 안 닦는 데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들의 지도하에 수업하기 전 학생들이 손을 닦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미 하고 계신지, 예방 내지 치료조치가 어떠한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폴로눈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인데 공기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접촉을 통해서, 전염병에 걸린 학생들이 사용한 물건을 만진다든지 해서 손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수칙 속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눈이 좀 이상해서, 어제 학교를 여러 군데 들렀기 때문에 제 자신이 걸렸나 싶어서 한참 걱정을 했습니다.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보니까 학교에서 현재 학생들에게 손을 자주 씻고 위생적으로 하라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花中 委員** 아폴로눈병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

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김영희 위촉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부산시에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있고, 제가 보건교사들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우선 학교보건법시행령을 보시면 보건교사들이 흔히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처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보건교사들이 안약을 주입할 수 있는데, 현재 안과를 한 번 방문하면 약 9000원 정도의 진료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하고 관련되어서 보건교사들이 안약을 모든 학생들에게 다 투약하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스탠딩 오더라고 해서 의사들이 이렇게 눈병이 났을 때는 이런 안약을 쓰라고 사전 표준처방을 해 주면 보건교사가 합법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연할 때는 보건교사 손에 안약을 쥐어줄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보건교사가 안약을 주입하는 문제하고 아까 薛勳 위원님의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사항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 새로 와서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위원장으로 느낀 소회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가운데에서도 玄勝一 위원님의 친북의 우려가 있는 교육 문제라든지, 金敬天 위원님의 통일교육 또 黃祐呂 위원님, 金貞淑 위원님의 역사교과서 문제, 薛勳 위원님의 탈북자 자녀들의 교육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교육부가 감당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가치관이 혼돈상태에 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기존 질서하고 새로운 질서가 하나의 전환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혼돈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교육 현장을 잘 몰랐는데 교육위원장으로 와서 약 두 달 간을 현장체험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교육부가 확실한 역사의식과 철학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검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교수들이 보다 상세한 지침을 내려주셔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이 제 마음대로 팽개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어느 것이 국민교육의 최대 가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확실한 역사의식과 철학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3분 산회)

(참 조)

**2002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2002. 9  
교육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주요감사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8. 감사요령
9.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붙임1) 국정감사결과건의서 양식

1. 감사의 목적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2년 9월 16일(월)~10월 5일(토) (20일간)

3. 감사대상기관

가. 위원회 선정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1호 대상기관	(1) 교육인적자원부 (2) 대한민국학술원 (3) 국사편찬위원회 (4) 국제교육진흥원 (5) 교원징계재심위원회 (6) 국립특수교육원	
제2호 대상기관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3)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4) 울산광역시교육청 (5)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6) 충청북도교육청 (7) 전라북도교육청 (8)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제3호 대상기관	없 음	

※( )내의 교육청은 교육감, 부교육감 및 국장 이상의 간부가 참고인으로 출석함.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 대상기관)

- (1) 서울대학교
- (2) 대한교원공제회
-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5) 한국학술진흥재단
-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구 분	교섭단체	감사위원	비 고
감사위원장	한나라당	○ 운영탁	

구 분	교섭단체	감사위원	비 고
위 원	한나라당	△ 박창달	
"	"	권철현	
"	"	김정숙	
"	"	이규택	
"	"	이재오	
"	"	현승일	
"	"	황우여	
"	새천년민주당	△ 이재정	
"	"	김경천	
"	"	김화중	
"	"	설 훈	
"	"	이미경	
"	"	전용학	
"	비교섭단체	정몽준	
"	"	조부영	

※○은 위원장, △은 간사임

나 . 지방감사반

감사반	감사대상	감사 반장	감사 위원	비 고
감사 1반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윤영탁	김정숙 박창달 이재오 김경천 김화중 설 훈 정몽준	
감사 2반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이재정	권철현 이규택 현승일 황우여 이미경 전용학 조부영	

5. 감사 일정 및 장소

가.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간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감사1반	감사2반		
9.16(월)	10:00	교육인적자원부(직속기관포함)		현 지	
9.17(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 지	
9.18(수)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현 지	
9.19(목)		감사준비			
9.20(금)		휴일(추석)			
9.21(토)		"			
9.22(일)		"			
9.23(월)		감사준비			
9.24(화)	10:00	대한교원공제회		현 지	
	16: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9.25(수)	10: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 회	
9.26(목)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현 지	항 공
	16:00	지역교육장과의 대화	지역교육장과의 대화		
9.27(금)	10: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 회	
9.28(토)		감사준비			

일 자	시간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감사1반	감사2반		
9.29(일)		휴 일			
9.30(월)	10:00	서울대학교		현 지	
10. 1(화)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현 지	전주, 대전1박
	16:00	지역교육장과의 대화	지역교육장과의 대화		
10. 2(수)	10:00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현 지	
	15:00	지역교육장과의 대화	지역교육장과의 대화		
10. 3(목)		휴일(개천절)			
10. 4(금)	10:00	교육인적자원부(직속기관포함)		국 회	
10. 5(토)		감사준비			

※감사대상기관(22)

- 본부 및 직속기관(6), 시·도교육청(8), 소속단체(7), 대학(1)

※배석기관(4) : 시·도교육청(경기, 경북, 전남, 대전)

※시·도교육청 감사제외 사유 : 경남·강원(수해관련), 부산(아시안게임), 제주(전국체전)

나. 중앙감사반

일 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9.16(월)	10:00	교육인적자원부(직속기관포함)	현 지	
9.17(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 지	
9.18(수)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현 지	
9.24(화)	10:00	대한교원공제회	현 지	
	16: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9.25(수)	10: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 회	
9.27(금)	10: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 회	
9.30(월)	10:00	서울대학교	현 지	
10. 4(금)	10:00	교육인적자원부(직속기관포함)	국 회	

다. 감사1반

일 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9.26(목)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현지	항 공
10. 1(화)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현지	항공 ※전주1박
10. 2(수)	10:00	전라북도교육청	전주현지	

※ 9.26(목) 16:00 대구지역 교육장과의 대화

- ※10. 1(화) 16:00 광주지역 교육장과의 대화
- ※10. 2(수) 15:00 전북지역 교육장과의 대화

라. 감사2반

일 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9.26(목)	10:00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현지	항공
10. 1(화)	10:00	충청북도교육청	청주현지	버스 ※대전1박
10. 2(수)	10:00	충청남도교육청	대전현지	

- ※ 9.26(목) 16:00 울산지역 교육장과의 대화
- ※10. 1(화) 16:00 충북지역 교육장과의 대화
- ※10. 2(수) 15:00 충남지역 교육장과의 대화

6. 주요감사사항

- 가. 2002년도 예산집행사항
- 나. 2003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 다. 2002년도 주요정책 추진사항
- 라.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 마.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바. 직속기관 및 소속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항 내지 ‘마’ 항에 관한 사항 포함)
- 사.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위원회 선정기관은 늦어도 감사개시 5일전(2002. 9. 11)까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늦어도 감사개시 4일전(2002. 9. 12)까지 동일한 자료를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자료를 국정감사 당일 감사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배부토록 함.

- (1) 2002년도 업무현황
- (2) 2002년도 예산집행상황
- (3) 2002년도 각종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 (4) 2002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5) 200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 (7) ‘(1)’ 항 내지 ‘(6)’ 항에 관련된 자료
- ※단,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소속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게 함.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1)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함.
- (2) 특히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 (2) 각 감사위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감사반장)은 이를 종합하여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함.

다. 증인등의 출석요구

-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가) 중앙부처는 국장급이상과 총무과장
  - (나) 현지 감사대상기관인 시·도교육청은 과장급이상
  - (다) 소속단체 및 관련기관은 집행간부급 이상(다만, 자회사의 장을 포함 함)
- (2)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음.

<참고사항>

- (1)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소속단체의 기관장은 본부감사('02. 9. 16 및 '02. 10. 4)시 증인으로 출석하게 함.
- (2) 감사대상인 소속단체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02. 10. 4)시 각 기관장을 증인



으로 출석하게 함.

- (3)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시에는 경기도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감사시에는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시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감사시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부교육감 및 국장이상의 간부

를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함.

-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감사시('02. 9. 27)시에는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사립대학교총장 협의회회장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함.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주 소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 장	정석중 (鄭碩鍾)	400413-xxxxxxx	전남대학교총장 (062-530-1001)
			광주 동구 운림동 라인A 201-803	
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 장 (직무대행)	이순복 (李淳福)	340530-xxxxxxx	경남대학교총장 (055-246-6228)
			마산 합포구 대외동 신동아빌라 A-303호	

- (5) 현지 감사대상기관인 시·도교육청 감사 시에는 산하교육장을 자진출석 하게 함.

라. 선서요령

-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함께 실시함.
-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감사반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함.
- (4) 위원장(감사반장)은 증인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마. 감사진행순서

- (1) 감사개시 선언
- (2) 위원장(감사반장) 인사
- (3) 증인선서
- (4) 업무현황보고 청취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현황설명
  - 세부사항 설명

(붙임1)

국정감사결과 의견서

○ ○ ○ 위원

구 분	시정 및 정부처리요구사항	비 고

- (5)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필요 시)
- (6) 위원장(감사반장)의 감사종료 인사
- (7) 감사종료 선언

9.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 (1)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사위원 간에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정부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토록 함.
- (2) 각 감사위원들에게 간사회의에서 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배부
- (3) 소속위원으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국정감사결과 의견서(붙임1 참조)를 수합하여 이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재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함.

○出席委員(13人)

金敬天 金貞淑 金花中 薛勳  
 尹榮卓 李揆澤 李美卿 李在五  
 李在禎 田溶鶴 趙富英 玄勝一  
 黃祐呂

○請暇委員(1人)

鄭夢準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尙元鍾  
 전문위원 鄭順泳

○政府側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李相周  
 차관 金信福  
 기획관리실장 李基雨  
 학교정책실장 李相甲

【報告事項】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李在五	教育	法制司法	한나라당
金榮駟	法制司法	教育	한나라당

(8월13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金榮駟	教育	法制司法	한나라당
李在五	法制司法	教育	한나라당

(8월14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李在五	教育	法制司法	한나라당
崔炳國	法制司法	教育	한나라당

(8월21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崔炳國	教育	法制司法	한나라당
李在五	法制司法	教育	한나라당

(8월22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李在五	教育	法制司法	한나라당
崔炳國	法制司法	教育	한나라당

(8월22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崔炳國	教育	法制司法	한나라당
金龍學	法制司法	教育	한나라당

(8월23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金龍學	教育	農林海洋水産	한나라당
李在五	法制司法	教育	한나라당

(8월23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李在五	教育	國防	한나라당
李嬾淑	國防	教育	한나라당

(8월26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李嬾淑	教育	國防	한나라당
李在五	國防	教育	한나라당

(8월27일)

○議案回附

대한민국학술원법중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 8월16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8월16일 회부됨.